

보건복지동향

(2006. 8. 21 ~ 2006. 9.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결과

199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발생률, 5년간 상대생존율, 지역별 의료이용율, 사망장소별 사망전 1년간 진료,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 계층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

-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암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암종별 발생률, 생존율, 의료이용 차이)를 파악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암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정책 전공)에게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 1999년 발생한 신규 암환자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남·여 모두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 5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소득1계층)보다 높았다.
- 남자의 경우 소득5계층의 4대암(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전체암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376.6명으로 소득1계층의 266.9명에 비해 1.4배 발생률이 높았다.
 - ※ 소득1계층 20%(42,300~317,860원), 소득2계층 20%(29,700원~42,300원), 소득3계층 20%(21,600원~29,700원), 소득4계층 20%(15,100원~21,600원이하), 소득5계층 20%(15,100원 미만)

입원환자식 급여 이후 관련 종사자 크게 늘어

- 입원환자식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사등 관련 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입원환자식을 위하여 고용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입원환자식 보험급여가 발표된 시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한 2006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89.7%가 늘어났으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1,335명으로 종전에 비하여 130%가 증가하였다.
 -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755명, 711명 증가되어 보험급여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원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영양사등 관계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많이 고용될수록 병의원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즉,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를 법정 요건보다 초과하여 추가고용에 따라 가산금액을 더해 4,440원까지 식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식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추가고용에 따른 가산금액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 일반식의 경우 가산금액은 영양사 추가 고용: 550원, 조리사 추가 고용: 500원, 선택 식단 제공: 620원, 직영가산: 620원(2006년 4월 10일 보도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자에 급여제한... 더 이상 방치 못해

- 본인부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오남용 극심*
-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은 뒷전, 과잉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
-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강화 및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을 강화할 방침*
-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으로 의료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금번 보건복지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

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며, 이중 3천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사람이 하루 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되어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이중 1명은 이웃주민(M/46)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십차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였음에도 이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진찰료를 청구하였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를 해주었다.

-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 이와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 이외에, 병원종사자인 J씨(경기도 S시)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여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하여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을 특별관리하기로 하였다.

- 수급권자가 36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희망의 전화 129, 휴대폰 “워드다이얼 서비스” 실시

SK텔레콤 사용자는 휴대폰에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자동 연결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8월 29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에 대한 ‘워드다이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워드다이얼 서비스’는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등 상담을 제공받고자 할 때 따

로 보건복지 관련 번호 안내를 받을 필요없이 휴대폰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문자를 입력하여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스템으로 SK텔레콤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휴대폰에 워드다이얼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출산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붙임: 총39개)를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자동 연결된다.

○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통합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로서,

- 2005. 11. 개통 이래 긴급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그동안 희망의 전화 129를 모르고 있던 국민들도 ‘워드다이얼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에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129번으로 자동 연결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워드다이얼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이 워드다이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워드다이얼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으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거대기금의 의미를 밝힌다

□ 국민연금기금은 현행제도 하에서 2035년에 최대 1,715조원(GDP의 48.7%, 금융자산의 4.0%), 정부 개정안 하에서, 2054년에 최대 5,810조원(GDP의 83.3%, 금융자산의 6.2%)에 이르게 됩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정적인 급여지급 보장, 후세대 및 현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금의 시장지배력 문제, 소비와 저축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문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meltingdown)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절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즉, 기금의 적립규모의 변화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규모의 경제적 의미 등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금운용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

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단은 한성신(기획단장,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외부위원 10명(대학교수 7명, 한국개발연구원 3명)과 내부위원 8명(보건복지부 2명, 국민연금관리공단 6명) 등 관계전문가 18명으로 구성, 8월 31일(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여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운영됩니다.

-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기획단 위원들을 격려하고, 기획단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와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발표

□ 정부는 30일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사회제도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30년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장기비전을 발표했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미래를 대비한 국가장기비전으로 제시했다.

□ 기획예산처는 이날 확정된 ‘비전 2030’ 시안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고,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으로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와 민간 합동작업단이 함께 마련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기반이 되는 주요 경제·사회제도의 혁신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10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2005년 1만6000달러에서 2030년에는 4만9000달러(2005년 불변가격 기준)로 늘어나 현재의 스위스수준에 도달하고, 국제경영개발원(IMD)기준 국가경쟁력 순위는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뛰어 오른다.

- 연금수급율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에는 66%로 높아져 60세 이상 노인 2/3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고, 치매·중풍노인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율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5%에서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에는 85%로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5.1%에서 2030년에는 16%로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는 비율은 현재 62에서 95%로 높아진다.

- 방과 후 활동지원을 받는 학생비율은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올라간다.

□ 정부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재정투자를 늘여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재정부담도 커져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됨으로 비전실현을 위해 2010년까지 초기 5년간은 제도혁신 추진하여 위협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 이 보고서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5년에는 GDP의 0.1%, 2011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2.1%에 이르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 5년 동안은 추가소요 4조원은 증세없이 연금·지역연금 등의 제도혁신과 정부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하지만 2011~2030년까지 추가소요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증세하는 방안, 국채발행과 증세를 혼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적절한 복지수준과 재원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실천과제 50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사업을 교육, 의료, 관광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위주로 재편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여 중고령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초중고의 수업연한은 5-3-4년제로 조정 및 가톨릭대학 도입, 해외고급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사회복지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중에 개혁을 완료하고 지역연금은 특수성과 재정의 지속성을 검토하여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여나가고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 FTA체결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규모를 2005년 GDP대비 0.1%에서 2030년에는 1%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07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977년 7월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그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을 거쳐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및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괴리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
 -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 향후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 의료보장체계에서의 합리적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동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의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 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어 「의료구제 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며,
 -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 9월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경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의 기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면서
 - 동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의의를 피력했다.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의료 인프라 눈에 띄게 개선”

- 보건복지부는 2005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단은 응급의료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 평가 결과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충족률이 '04년 76.6% → '05년 90%로 개선되었다.
 - 이는 2003년 응급의료기금 확충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자금 융자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재원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우수기관 및 취약지역의 149개 응급의료기관 인력·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6년 응급의료기금 1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20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하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단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은 9월 19일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기관 정보접근, 방송접근, 정보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 공공기관의 낮은 웹 접근성, 시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한 방송프로그램 부족, 정보화 교육 신청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방송, 청각장애인에게는 아직은 높은 벽!

- 청각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수화통역 화면이 너무 작거나, 화면상 내용과 자막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인 10명중 6명이, 자막방송의 경우 청각 장애인 10명중 4명이 내용의 절반 이하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EBS에서 운영하는 위성 1, 2 채널은 자막방송을 하지 않으며, 방송위원회 주관으로 방송 비디오를 보급사업만 하고 있어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 수험생들의 방송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전체의 4%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방송 소외계층이라는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

-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 5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
 -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정보량도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로는 정부기관의 경우 대체텍스트 제공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송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의 경우 대체텍스트가 대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정부기관 23개소중 8개소, 방송언론 7개소중 4개소, 금융기관 6개소중 4개소, 장애인관련기관 11개소중 8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메인화면 기준)
 - 따라서 기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비장애인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설계·제작시 장애인들에게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정보화 교육 신청

-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중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TNS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보화 교육의 경우 4점 만점에 3.26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받은 장애인 10명중 8.5명(84.4%)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특성상 정보화 교육의 경우 가급적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신청시에도 장애인들의 검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밖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정책으로는 이용요금 보조(28.4%)가 가장 높았으며, 정보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향후 각 부처가 관련 정책 추진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화 접근 체감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활동에 대해 일반 장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www.cham21.or.kr)할 예정이다.
- 또한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나 각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에 링크할 예정이며,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최초'로 장애인 전용회관 건립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여의도에 있는 중앙빌딩(소유주: 이화학원)을 최종 선정·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2007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연 건축면적 5천 4백평 면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규모로 조성된다.
- 또한 회관에는 국제회의장을 포함 각종 회의실 및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출 예정이다.
- 그간 여성플라자나 노인회관 등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회관은 다수 건립되었으나, 장애인이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없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복권기금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정부 및 장애계 대표로 구성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 회장))'를 구성하여 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 '수화'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변승일 위원장은 '회관 건립을 통해 국내외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교류의 중심점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 '회관 건립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니 만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정식 명

칭을 공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및 장애인단체의 홈페이지를 비롯 팩스(02-503-7899)로도 응모가 가능하며, 최우수상 1명은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출입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전면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의 자료 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06.1~'06.8)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0,505명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했다.
- 이중 89.7%인 1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되었다.(최다 89회)
-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부양의무자·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에도 해외출국기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적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여행이 아닌 생계형 출국(보따리상 등)에 해당하였으며, 귀화한 중국동포 등의 일회적인 가족방문이나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학교 차원의 해외 수학여행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사례 별첨)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동 조사를 통해 해외출국으로 소득 증가가 있는 경우 그 소득액을 파악하여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할 바 있다.
- ※ '00.1~'05.9월 기간중 출입국사실이 있는 수급자 82천명 중 13천명 보장중지, 1천명 급여액 삭감조치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해외출입국 사실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적정수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해외출입국자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 앞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 근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일선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재산·출입국사실 등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다만, 보건복지부는 작년의 조사결과로 볼 때 수급자의 해외출입문제를 호화관광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등의 대책이 수급자 조사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적정급여조사기획단’에서는 일선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소득·재산 등 자료의 확보, 조사기법 개발·교육 등 자산조사의 체계화·과학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03년부터 매월 2~3개 시·군·구에 대해 중앙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는 소득·연금·지적·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일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 ※ 금년도 지자체 일제조사 및 중앙현장점검을 통해 12천가구에 대해 보장종지·급여조정 등 조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9월 20일(수)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부제: “사회투자서비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을 발표하였음.
- 이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첫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 보건소 방문보건인력 2천명을 내년에 추가 배치하여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질병관리·검역,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인력 확충

-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를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확대(’06. 9백개소→’07. 18백개소, 18백명) 및 아동복지교사 배치(’07. 27백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에 대한 수발·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 39천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충(’06. 105개소 → ’07. 165개소, 560명)
- 아동행동치료, 치매 예방, 비만극복·영양관리 서비스 등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07. 17천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방안으로는
 -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민·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Fee Sliding Scale)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구매 부담 경감
 - ※ ’07년 약 15만명의 노인·중증장애인·산모신생아 가정 등에 대해 월평균 20만원의 바우처 지원
 -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
 -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간호서비스 개선(’07년 1,700명 고용 효과 예상)
 - 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중풍 노인에게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추진(’08년 7월 시행)
 - 말기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심리적 지지·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
 - 일상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 ’06년 4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면서,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함으로써 병원식사의 질 수준 향상 및 영양사·조리사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둠

- ※ '06.4~7월 기간동안 영양사 1,250명, 조리사 1,335명 신규 채용
- 셋째,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 노인요양보호인력, 가사·간병인 등 서비스 인력의 자격 및 교육훈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아동·노인 등 다양화되는 복지요구에 맞는 전문자격 도입 추진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 관리, 질 수준 모니터링 등을 위한 근거법령과 전담기능 마련
 -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지역별 서비스 수요에 맞게 유연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 운영방식의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특히,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충 외에 서비스의 시장화와 품질 수준 제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시장형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할 계획임
 - '07년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지원(6만개) 및 제도개선(1만개)에 의해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7만여개이며,
 - 향후 재정지원에 의한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보다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바우처 지원, 품질관리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

- 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와 관련하여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여부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달려있다고 볼 때, 지자체의 높은 호응은 본사업의 성공을 예감케 해주는 좋은 징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 이처럼 2단계 시행지역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내년 7.1시행예정인 3단계 지역은 제주도의 2개 행정시와 46개 군지역만 남게 되며, 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조직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위주로 개편되어 지방행정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 지방행정조직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생활지원서비스 통합포털(ISP) 구축을 완료시켜 7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 상담과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의 모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앞다퉈 신청

- 정부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이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7.1일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한 1단계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1.1일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목표인 100개 기관보다 훨씬 많은 131개 시군구(2,198개 읍면동)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사업취지에 지자체들이 절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청단체 모두를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9. 19일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단계 참여 시군구와 시도 관계자 277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앞 다퉈 「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혁신」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는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데다, 1단계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 본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